

# “가계부채 위험은 완화…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필요”

금융불균형 위험, 지속 유의해야  
잠재적 부실요인 선제 관리 강조

한국은행은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의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개인사업자대출 증가 등 금융불균형 위험은 지속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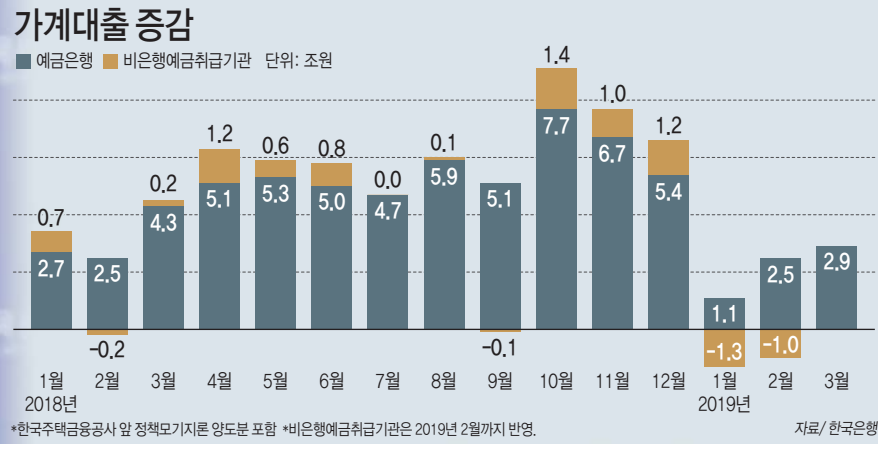
9일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가계대출은 정부대책 및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증가세 둔화 흐름을 지속했으며 강화된 거시건전성 규제 유지, 최근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계신용은 1534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 중에서 가계대출은 1444조5000억원으로 5.4% 증가했다.

지난 2016년 11.6%까지 치솟던 가계신용 증가율은 2년 사이에 6%포인트



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하진호 부총재보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기자설명회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떨어졌다. 2016년 내내 급증하던 가계대출 증가액도 평균치가 낮아졌다. 지난해 2분기부터는 10조원대로 증가액이 낮아지며 3분기 연속 하향세를 이어갔다.

한은은 가계부채 누증 위험은 종전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4분기 가계신용의 전 분기 대비 증가율은 3.55%였으나 2017년 4분기 2.23%에 이어 지난해 4분기 1.37%로 안정화

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최근 몇년새 크게 늘었던 분양 아파트의 입주 시기에 맞춰 잔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영향을 미쳤을 뿐 전체적인 가계대출 흐름은 안정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달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1~2월 동향을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의 하향 안정화기 기조는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며 “금리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낮아지면서 금리 요인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도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에 따르면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등 제2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이 지난해 29.9%를 나타내는 등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 가운데 부동산·임대업 비중은 38.1%에 달한다. 전년(33.5%)에 비해 4.6%포인트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016

년 12.9%에서 지난해 2.9%로 10%포인트가량 하락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그간 지속적인 관리 노력에 따라 가계대출은 2018년 이후 증가속도가 상당히 안정화되는 모습”이라면 “제2금융권 대출의 특성상 향후 경기상황, 금리동향 등에 따라 건전성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잠재부실요인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도 금융불균형 위험에 계속 유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은은 “수도권 아파트 분양 및 신규 입주 예정 물량 등 대출증가 요인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가계대출 움직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개인사업자대출 추이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 “세계경제, 둔화는 맞지만 위기는 아니다”

급격한 경기 악화 가능성 ‘제한적’

세계경제 성장세의 급격한 둔화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부 급격한 경기 악화 우려가 있지만 선진국의 양호한 고용상황,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조절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둔화’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9일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향후 글로벌 경기의 급격한 둔화를 우려하는 견해가 있다”면서도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성장세가 약화되겠지만 양호한 고용상황, 소득여건 개선으로 성장세가 급격하게 둔

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향후 글로벌 경기 흐름에 대해 급격한 경기 둔화와 연속락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존재한다. 부채누적, 정책대응 여력 부족 등이 그 이유다. 또 주가,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의 버블 가능성이 과거 수축기와 같은 급격한 경기 둔화를 유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은은 “글로벌 부채문제나 글로벌 무역분쟁 우려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경험 등으로 주요국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개선됐고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협상 등도 관련 국가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영향을

고려할 때 세계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과거 글로벌 경기 변동을 보면 1990년 이후 총 7번의 수축기가 있었다. ▲1990~93년 걸프전 및 유가상승 ▲1995년 유럽 통화위기 및 일본 자산버블 ▲1997~98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0~03년 닷컴버블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12년 유럽 재정위기 ▲2015~16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및 자원수출국 경기 부진 등이다.

한은은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과거 급격한 수축기 직전에 비해 완화적인 데

다 최근 들어 주요국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종전보다 완화적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세계경제 성장세가 급격하게 둔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견해를 뒷받침한다고 분석했다.

올해 1~4월 중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영 상황을 보면 미 연준은 경제성장, 물가상승 둔화 전망 등을 배경으로 금리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한편 보유 자산 축소를 중단하기로 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현재의 낮은 정책금리를 유지하는 기간이 종전 예상보다 연장될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정책금리를 동결했고 일본은행은 종전의 완화기조를 유

지했다. 이들 국가를 제외한 G20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21개국 중 18개국은 정책금리를 동결했고 칠레,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인상, 인도 중앙은행은 인하했다.

아울러 한은은 금융시장 가격변수에 반영된 글로벌 경기의 급격한 둔화 가능성이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등을 활용해 추정된 미국의 경기침체 확률이 다소 높아졌으나 과거 경기 수축국면 직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글로벌 성장세가 급격하게 둔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글로벌 금융·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여건 변화와 경기 국면에 미칠 영향 등을 계속해서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주 기자

# “성장률·물가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결정할 것”

당분간 금리 동결… 완화기조 유지

한국은행은 완화적 통화정책기조를 유지해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물가 경로, 금융안정에 유의하며 당분간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9일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향후 통화신용정책은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의 추이와 영향을 고려해 성장과 물가가 예상 경로에 부합해 가는지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금융안정에도 유의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우리나라 경제성장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월과 4월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다.

한은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성장

《경제성장률 전망》<sup>1)</sup>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18			2019 <sup>e</sup>			2020 <sup>e</sup>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GDP	2.7	2.8	2.5	2.5	2.3	2.7	2.6
민간소비	2.8	3.2	2.5	2.5	2.2	2.7	2.5
설비투자	-1.6	1.9	-5.0	0.4	-5.3	6.4	2.6
지식재산 생산물투자	1.9	2.8	1.1	2.5	2.0	3.0	2.9
건설투자	-4.0	-0.1	-7.4	3.2	-6.4	-0.3	-1.8
상품수출	4.0	2.8	5.1	2.7	1.4	3.9	3.0
상품수입	1.9	2.5	1.3	1.6	-1.8	5.0	2.5

주: 1) 2019년 4월 전망 기준.

/자료=한국은행

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에도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성장과 물가 전망이 하향 조정됐지만 하반기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 글로벌 무역 분쟁 등 대외 경제 여건 흐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점,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지난달 18일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4%에서 1.1%로 각각 낮췄다. 그러나 올해 1분기 성장률은 -0.3%로 역성장했고 소비자물가상승률도 4개월째 0%대를 기록했

다. 그럼에도 한은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완만한 증가 흐름을 보이겠지만 가계소득 개선세 둔화 등으로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정부이전지출 확대 등이 가계의 소비여력 증대에 기여하면서 민간소비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IT부문 중심의 조정이 지속되었으나 하반기 이후 반도체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투자는 주택 인허가·수주·착공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봤다.

수출은 올해 중 세계교역 증가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도체 경기 조정, 미국 무역 정책 관련 불확실성 지속, 중국 성장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흑자기조가 유지되었으나 상품수지 흑자폭이 축

소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흑자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앞으로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 추이와 영향을 고려할 계획이다.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으로는 ▲세계교역 여건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금융불균형 위험 등을 꼽았다.

한은은 “올해 교역신장률은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으로 지난해보다 낮아질 전망”이라며 “글로벌 분업 유인 약화, 지식집약화 진전 등 구조적 요인이 교역 증가세를 둔화시키겠지만 향후 반도체 수요 회복 가능성, 미·중 무역협상 진전 상황 등에 따라서는 교역 여건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 미·중 무역협상 전개 등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인 만큼 향후 주요국 경제지표의 움직임과 글로벌 통상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주 기자